

목포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차질빛나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전남도와 내달 운영협약 해지
성범죄 발생률·피해자 이동 고려 대체 병원 찾기 난망

성범죄 피해자들을 신속 지원하는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가 내달 운영 해지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 설치요건에 부합하는 전남 서부권 의료기관들이 선풍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전남도의 입장과 성폭력 피해 접수 비율 등을 고려해 목포에 설치해야 한다는 경찰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15일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부권 해바라기센터를 운영 중인 목포중앙병원의 계약이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 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 목포중앙병원 4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매년 국비·도비 6억4천여만원의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지난해 11월5일 센터 내 조직원간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남도에 운영 해지 신청을 접수, 여가부는 다음 운영기관의 선정 기간을 고려해 최장 6월30일까지 운영을 조건으로 해지를 승인했다.

도는 올해 1월1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중·서부권 통합 해바라기센터 모집공모를 냈지만, 현재까지 서부권에서는 영광기독병원 한 곳만 지원했다. 도에 따르면 영광기독병원은 6차 공모에서 지원해 지난 14일 여가부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조사와 치료·보호를 위해 목포와 인접한 곳에서 센터가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서

부권 13개 경찰서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총 438건으로 이 중 39.7% (174건)가 목포에서 발생했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전담함에 따라 센터 이동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서부권 해바라기센터가 영광에서 운영될 경우 목포 시내에서는 70km, 진도나 완도 등 섬 지역에서는 120~160km 가량 떨어져 있다.

반면, 의료기관들은 수익성 확보와 센터 인력 유지등의 어려움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한 인력의 정규직화에 따른 운영 부담, 센터 사업자 변경 시 고용 승계 문제 때문에 난색을 보인 곳도 있다.

기존 운영기관인 목포중앙병원이 지난해부터 센터 내 ‘갑질 논란’ 등 내용을 치렀고, 공식성에 가까운 센터 운영으로 경영 및 산부인과 의사 고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산부

인과와 응급실이 있어야 하고 병원 내에 100㎡ 이상의 상담실·치료실 등 전용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설치 요건이 있다. 서부권 중심에 있는 목포와 강진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10여곳에 불과하다.

목포한국병원과 새한병원, 강진의료원은 병원 내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의료원과 목포기독병원은 산부인과 진료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70%)와 전남도(30%)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공간 마련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형 병원이 적은 지역 특성상 ‘통합형’ 센터 대신 심리치료 등이 제외되는 ‘위기 지원형’으로 규모를 줄여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병원을 먼저 발굴해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추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점병원 등 협력병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나라사랑 보훈 정책 세미나
오늘 5·18교육관 대강의실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나라사랑 보훈정책 세미나’가 16일 오전 9시 5·18교육관 대강의실에서 마련된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나라사랑 보훈정책 세미나는 3·1운동과 6·25세대, 월남전세대, 5·18민주화세대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으나 시민들의 무관심 받고 있는 현재 이를 극복해 보고자 보훈정책 토론회 및 토론큐콘서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통을 통해 국가의 미래, 통일에 대한 사회적 비전을 공유한다.

세미나 일정으로는 ‘토론큐콘서트(누가 이 나라를 지키는가?)를 주제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사회적 보훈정책 마련세시)’, ‘평화공존체험(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국립 5·18민주묘지, 망월묘역 참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은성기자



정성 한아름 제자사랑 세족식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광주 동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자사랑 세족식’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동영고는 매년 ‘스승은 제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 제자는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세족식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리기자

경찰관 사칭 10대 성폭행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양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 차 안에서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앱으로 만난 A양을 “내가 북부서 형사인데, 성매매 단속 중이다”고 속였다.

A양이 “봐달라”고 사정하자, 양씨는 대가를 요구하며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양씨의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 1일에는 모바일 메신저로 A양에게 연락해 “처벌받아 벌금 내기 싫으면, 5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양은 양씨의 협박해 돈을 보내려 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해 실체 숨글하지는 않았다. A양의 진정서를 받아 양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환준기자

중학생이 체육교사폭행 고소

중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한 중학교 학생인 A(14)군은 이 학교 체육교사인 B(35)씨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지난 4일 제출했다.

A군은 고소장에서 “수업시간에 마음대로 자리를 바꾼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얼굴 등을 때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창고로 데려가 망치를 던지며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의 부모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폭행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문철현기자

북구 노사민정 상생 행복한 일터 만든다

올해 협력 활성화 지원 4대 분야 16개 사업 중점 추진

광주 북구가 안정적인 노사 관계와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역 노사민정 공동의 대화와 상생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19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지난 4월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청 관계자, 구의원 등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증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올해 추진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인권 보호 ▲지역 노사 상생 우수사례집 제작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콘텐츠 발굴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 4대 분야 16개 사업도 의결했다.

올해 북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인 ‘일자리 창출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노동상담데스크 운영,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4대 보편 가입 캠페인

“선생님은 푸른 보리 키우는 봄 흙 같은 존재”

장석웅 전남교육감 스승의날 일선 교사들 감사의 편지

“스승은 푸른 보리처럼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동안 가슴에 거름을 엮고 따뜻하게 썩어가는 봄 흙 같은 존재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뿐 아니라 전남교육에도 그런 존재입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15일 도종환 시인의 ‘어릴 때 내 꿈은’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제38회 스승의날 일선 교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전남교육청 전자게시판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선생님들의 노고와 따뜻한 눈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전남교육이 변화의 움을 띄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 교육감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꽃길만이 아닌, 바람 찬 날도 많은 것”이라며 “푸른 보리를 키우는 봄 흙 같은 마음으로 전남교육의 대지를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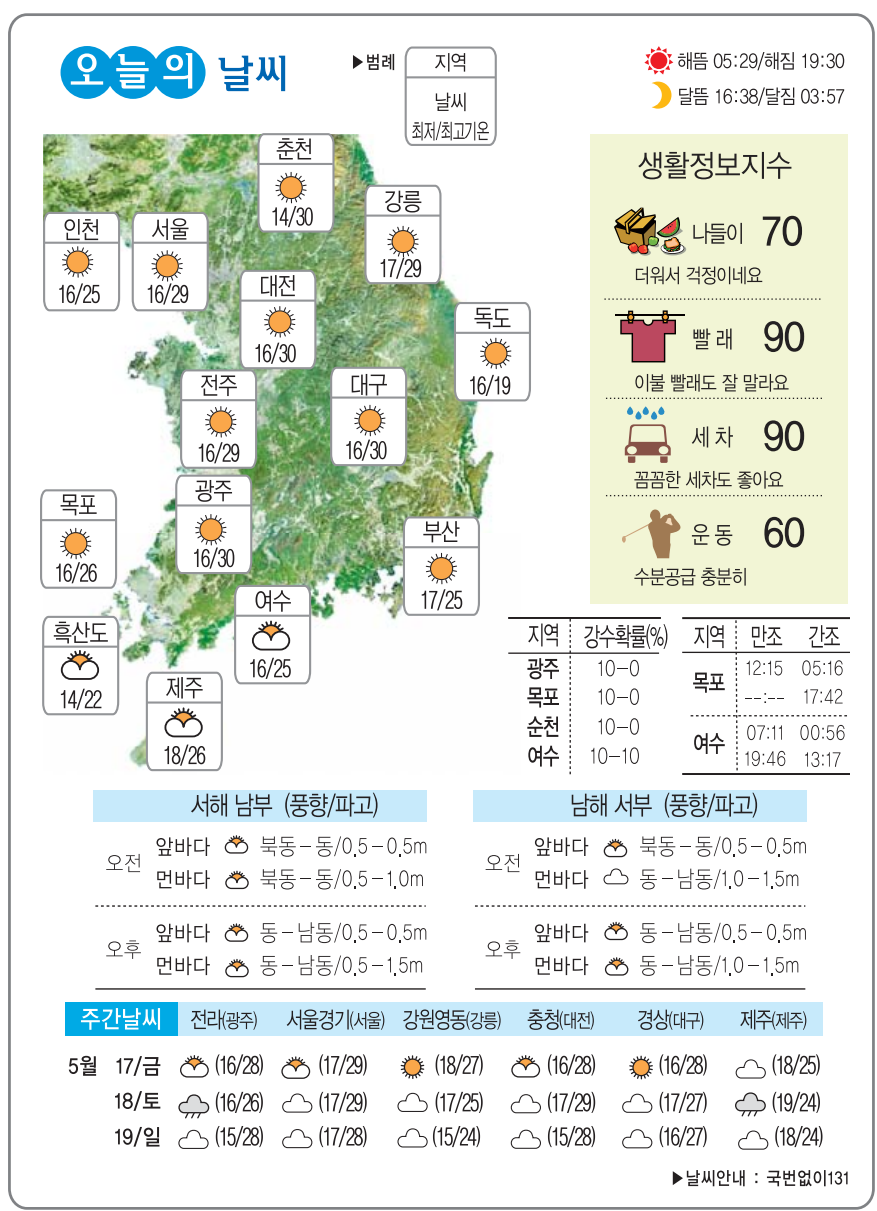
이어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이 되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다. 더욱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며



“선생님과 함께라면 먼 길도 즐겁게 가겠다”고 다짐했다.

“보성 읍어중학교 첫 교단에 서던 날, 설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회상한 장 교육감은 “뚜벅 뚜벅 걸음 내어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말로 편지를 맺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도교육청 간부들과 함께 축하케이크를 자르며 스승의날을 자축했다. /김종민기자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광주 첫 폭염특보...2008년 시행 이래 가장 일러

연일 30도를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승의 날인 15일 오후 3시를 기해 광주시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는 2008년 6월1일 폭염특보 제도를 시행한 이래 가장 이른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4시를 기점으로 광주시 풍양동 기온이 33.1도를 기록했으며 내일도 33도를 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담양 31.1도, 광양 30.6도, 광주 3

0.3도, 곡성(옥과) 30.3도, 구례 30.2도, 목포 25.9도, 여수 24.6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량이 강해 기온이 오르고 있다. 오는 17일 밤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문철현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남광주시장 출점 제동

유통업상생발전협 “상인 동의서·상권영향평가 등 보완 필요”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초입에 출점을 추진 중인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제동이 걸렸다. 준비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1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노브랜드 예정지 인근 전통시장 2곳은 상인회 집행부가 작성한 출점동의서를 두고 상인끼리 갈등하고 있다.

협의회는 위조 논란에 휩싸인 출점동의서를 공정한 방법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상인회에 요구했다. 이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도록 동구에 권고했다. 이마트는 면적 436.7㎡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는 계획을 올해 3월29일 동구에 제출했다.

노브랜드가 매장을 내리는 장소는 자

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km’ 안쪽에 자리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을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춰 상권 활성화 시나지를 도모한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동시장, 대구 월배시장, 경기 안성 맞춤시장·여주 한글시장, 충남 당진 어시장, 경북 구미 선산봉황시장·안동 구시장 등에 문을 열었다. 노브랜드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인들은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승지기자

광주시청 주차장 포화상태, 유료화되나

시의회 문제 제기...市 “검토 시점”

광주시청 주차 문제가 심각해 유료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주차장 주차면 수는 지상 839대, 지하 548대 등 총 1천378대다. 등록 차량은 공직자 1천579대, 관용 241대, 의회 115대, 임주 사업소 110대 등 2천229대에 이른다. 하루 평균 민원인 차량 1천531대가 지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무료로 청사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서울은 10분당 1천원, 부산·대구·인천·울산은 1일 1천~8천원, 대전·세종은 각 월 1만5천,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김익주(광산구 1) 시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청 주차장이 부족해 불편이 크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료화밖에 없다”며 “민원인은 기본 1~2시간 무료 이용, 직원들은 일권이나 월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공직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통근 버스를 이용하고 밤샘 주차하거나 며칠씩 주차하는 차량도 줄어들 것이다”며 “종일 주차 차량이 줄어들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유료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및 관공서가 밀집된 상무지구 중심지역에 청사가 위치해 주변 건물 이용자 및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다예기자